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1. 15.(수) 총 2매(본문 2)	
담당 부서	물류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성훈, 사무관 이충수, 주무관 신성일 • ☎ (044) 201-3993, 3997	
보 도 일 시		2020년 1월 16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15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첨단 정보통신기술(ICT)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한다. 정보망 연계 분석 결과, 적발 9배 급증

□ 올해 1월 31일(금)부터는 카드결제내역과 화물차 이동경로 등을 분석하여 부정수급 화물차주를 관할 지자체에 매일 통보하고,

○ 지자체 공무원이 POS 정보를 수집하여 업로드하면 부정수급 의심 거래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도 보급된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‘19년 하반기 합동점검에서 시범 적용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부정수급 방지가 효과*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.

* ‘19년 하반기 합동점검에서 적발건수(‘19.상 대비) 약 8.7배 증가(116건 → 1,035건)

○ 지난 ‘19년 12월 30일(월)부터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관련 시스템*을 연계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수급자격을 상실한 화물차주들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원천적으로 차단**하고 있으며,

* 면허관리시스템,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,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

** 의무보험 미가입, 운수종사자격 취소 등으로 매일 200건 이상 지급 거절 중

-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

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.

- 또한 자동차검사시스템의 주행거리 대비 유가보조금 지급량이 지나치게 많은 화물차 집중관리 등 공공기관이 기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점검방법들을 개발할 예정이다.

□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합동점검 강화, 교육을 통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.

- 국토부·지자체·석유관리원과 함께 연2회 실시하는 합동점검을 연 4회로 확대하고, 점검 주유소도 대폭 확대(약 500개 → 800개)하고,

-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화물차주 등은 보조금 지급정지, 감차(번호판 회수),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.

- 부정수급 사례,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사이버 강의, 교육동영상, 표준교안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자체,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수업무종사자 교육에 활용하고,

-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여 화물차주 등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”이며, “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이충수 사무관(☎ 044-201-399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